



진보·보수
대권주자들
출마 러시
06



Economy

	코스피 2293.70 (-40.53)		코스닥 643.39 (-15.06)
	금리 (연고채 3년) 2.434 (+0.021)		환율 (원·달러) 1479.35 (+6.15) <9일>

美 한국 등 57개국 상호관세 발효

원화값 16년來 최저 韓 경제전망 줄하향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에 원화값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 전쟁 확산 우려에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불가피해졌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원화, ‘독보적 약세’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84.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거래 종가인 1473.2원보다 10.9원(0.74%)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6년 만에 최고(원화 가치 최저)다.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연초보다 6.8% 상승했다. 유로화도 5.5% 올랐다. 호주 달러도 3.8% 비싸졌다. 반면 위안화는 0.6%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원화의 낙폭은 1.1%를 기록해 위안화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트럼프發 전세계 보호무역 확산
수출 의존도 큰 韓 타격 불가피
타 통화 대비 원화 약세 뚜렷
對中 무역축소 압박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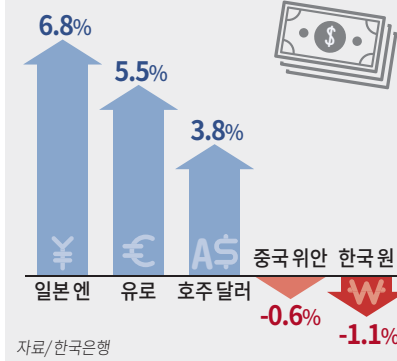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지난 8일 102.701까지 내렸다.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초 달러 인덱스는 109.209에 달했다. 달러 가치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원화가 타 통화와 비교해 크게 약세라는 의미다.
◆ ‘관세전쟁’,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원화가 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해외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의 보편 관세와 5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개별 관세)로 구성된 대규모 관세 정책을 공표했다. 보편 관세는 5일, 상호 관세는 9일 시행됐다.

보편 관세는 대(對)미 무역 흑자액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화

기간: 2025년 1월 1일~4월 9일



자료/한국은행

한국은 25%,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국에 54%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중국이 34%의 관세로 ‘맞불’ 대응에 나서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로 인상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를 늘릴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최저 10%의 보편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철강 제품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자 ‘셰이프 가드(국가별 수입 할당량)’를 이달 들어 15% 감축했다.

보호무역이 확산하면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35.7%에 육박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 이하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가운데 흑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흑자액 상위 20개국 가운데 28.2%를 미국이 차지한다. 트럼프가 막대한 대(對)미 흑자액을 이유로 관세를 압박 중인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하고 중국과의 무역 축소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을 향해서도 대(對)중 무역 축소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약 1400억 달러 규모로, 수입의 22.1%를 차지했다. 수입액 2위·3위인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5.7조 규모 ‘꿈의 소재’ 유리기관 선점 경쟁 (2034년)

고온에 변형적어 미세 회로구현 유리 삼성전기, 세종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SK 애플릭스, 작년 美 생산공장 완공 LG이노텍도 핵심공정장비 발주 시작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떠오른 유리기관을 둘러싸고 삼성, SK에 이어 LG까지 가세하며 국내 3사의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리기관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관을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관 대신 유리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탄해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어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기관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

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 ‘꿈의 기관’으로 불린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에 유리기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관을 적용한 상용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파트너스는 “유리기관 시장이 올해 약 2300만 달러(약 316억원)에서 2034년 42억달러(약 5조 7천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시장 잠재력은 이미 확인돼 수익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관 파일럿 생산라인

을 구축하고, 이르면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관 샘플(시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는 SKC 자회사 애플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관 생산 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도 최근 본격 참전을 선언했다. 최근 경북 구미 공장에 유리기관 시험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코스피 2300대 붕괴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취재진들이 증시 지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334.23)보다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58.45)보다 15.06포인트(2.29%) 떨어진 643.39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73.2원)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관세 여진 대비… 정부, 10조 추경안 곧 제출

최상목 “추경, 타이밍 중요해
국회 조속한 논의·처리 부탁”

트럼프 발 ‘상호 관세’가 정식 발표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규모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통상환경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참석자들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 및 경

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탄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막차’ 타고 대구 간 이준석… “이재명 대권 목전… 이기는 선택 되겠다”
▲ ‘진보 잠룡’ 김부겸, 대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

/사진 뉴시스

▲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 16일 실시기로… 국힘 “또 졸탄핵” 반발
▲ 이철우 경북지사 “이재명 이길 새 인물은 나”… 대선 출마 선언

▲ 안철수, 의대서 첫 대선 일정… “의료시스템 복구해야”
▲ 유승민 “尹 아바타 나오면 통하겠나… 100% 국민경선 해야”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최종확정 시행은 11월 → 내년 4월로 늦춰져

최종 편입완료시점 11월로 동일
기재부 “투자자 편의 고려한 조치”
“대내외 불확실성 간접영향” 해석도
최대 560억 달러 자금유입 기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편입 시점은 당초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5개월 연기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을 공식 발표하고, 편입 시작 시점을 내년 4월로 조정했다. 당초 계획됐던 분기별 편입 방식은 월별 분할 편입으로 변경됐으며, 최종 편입 완료 시점은 기존과 동일한 2025년 11월이다.

FTSE 러셀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시스템 테스트 수요 등을 감안한 기술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계 투자자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점에서, 실거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변경이 투자자 편의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요청은 없었고,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과 개방 의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국채 시장 자체의 문제였다면 편입 완료 시점까지 조정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편입 시점 연기에 미쳤을 가능성은 0%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선 최근 한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취약한 산업 구조, 대통령 탄핵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 등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흔들었고, 이로 인해 편입 일정이 미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해외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8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또한 차례 낮췄다. 이는 일주일 전 1.2%에서 0.9%로 조정된 데 이어 다시 하향한 것이다. 지금까지 WGBI 편입이 확정

된 이후 편입 시점이 조정된 사례는 없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안에 기대됐던 외국인 자금 유입, 국채 조달비용 감소, 환율 안정 등의 효과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대 560억달러(약 75조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기대가 약화되고,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패시브·액티브 자금 유입 시점이 늦춰지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FTSE 러셀은 과거 중국 사례에서도 투자자 준비 상황에 따라 편입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될 WGBI 편입이 한국 채권시장의 외국인 기반을 넓히고, 외환 시장 안정 및 자금조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등 ‘고용한파’ 지속

통계청, 3월 취업자수 0.7% 증가
보건업 늘고, 건설·제조업은 급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수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제조업 부문과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0.7%) 증가했다. 3월 증가 폭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15세 이상) 역시 6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 연령대별로 따져 보면 고용시장 명암이 갈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 및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제조업(-11만2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최저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집값 뛰자 대출 ‘꿈틀’… 가계부채 1.4조 ↑

한은, 3월 가계대출 잔액 1145조
신용대출 줄고, 주담대 증가 영향
주담대 잔액 909.9조, 2.2조 증가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서, 시차를 두고 오는 4~5월 주담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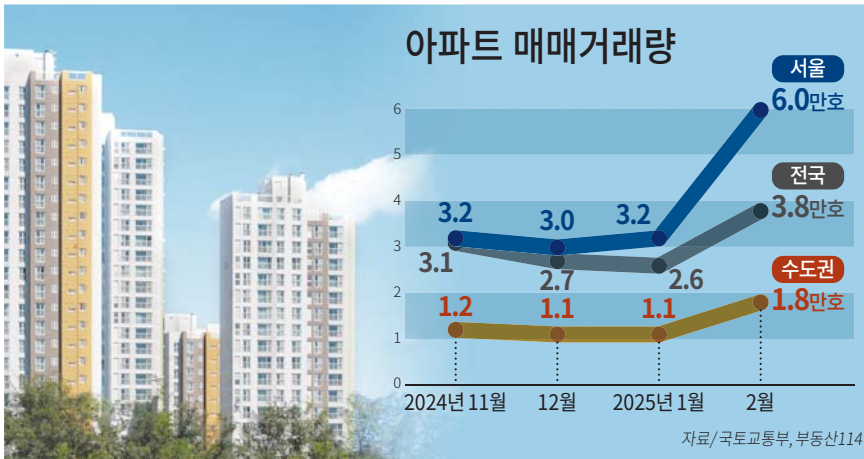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3월을 모두 더한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으로 ▲2023년 -8조1000억원 ▲2024년 3조5000억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90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3조4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흐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234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감소 폭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시차를 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주택거래가 둔화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기타대출은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이 반영되면서



기타대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폭은 4~5월 더 커질 전망이다. 2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 호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국이 같은 기간 8000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박 차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2~3월 중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4~6월) 이후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후 한달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주택거래량을 둔화시켰지만,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흐름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며 대출금리가 떨어

어지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 토허제 등 규제가 비대상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했다.

권 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뤄진 주택 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처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누적신청자 12만명

캠코, 누적 신청 채무액 19.4조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1만9768명, 누적신청채무액은 19조36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에서 지난 1월 10만8387명, 2월 11만3897명, 3월 11만976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 채무액 역시 지난해 연말 16조7305억원에서 지난 1월 17조5004억원, 2월 18조4064억원, 3월 19조3684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해 말 기준 3만2293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2조6721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OECD, 韓 성장률 전망치 2.1→1.5% 내려

▶▶ 1년 ‘원화값 16년來 최저’·‘서 계속

◆ 한은·OECD, 성장률 전망치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0.6%p 낮춘 1.5%로 수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망치를 2.0%에서 1.5%로 하향했다. 한은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가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국내 성장률의 하향 조정 분위기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압박을 가중할 공산이 크고,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등 환율의 추가 상승 제약 요인에도 상호관세와 미·중 환율전쟁 리스크가 환율을 15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악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